

# 의대 전남대 75·조선대 25명 증원...“전남 의대 신속 추진”

정부, 2천명 증원해 배정...전남대 200명·조선대 150명으로 확대  
올해 고3 내년 입시부터 적용...대학들 신입생 선발 위해 학칙 개정

정부가 전남대와 조선대의 의대정원을 각각 75명, 25명 늘려 200명과 150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단 1명도 늘리지 않았다.

〈관련 기사 7면〉

특히 정부는 전남이 국립 의대 신설을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000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전남대와 조선대 등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현재 정원이 각각 125명인 전남대와 조선대는 200명, 150명으로 대폭 늘었다. 조선대는 교육부에 애초 45명을 배정 신청했으나 25명으로 줄었고 50명 안팎이었던 전남대는 크게 늘었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서울권 8대 대학 가운데 정원이 135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대 의대보다 많은 정원을 배정받았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안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남대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

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 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새 정원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차를 올린 고3내년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각 대학은 곧바로 신입생 모집을 위해 필요한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당장 올해 고3부터 늘어난 정원을 적용해야 하는데, 5월까지 수시모집요강을 확정하는 것부터 의과대학 교육환경을 정비하는 것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남대 의대와 조선대 의대 관계자들은 “일단 부족한 교수진 확충이 필요하고, 증원에 따라 시설과 교육 기자재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발표했던 규모의 증원을 밀어붙임에 따라 향후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의료계는 더 거센 반발을 할지, 증원을 인정하고 향후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대화에 나설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미 한 달을 넘긴 의료공백 사태가 한층 더 깊어질지, 봉합되는 수순을 밟을 지는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약 ‘의료계의 통일된 대화 창구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별다른 대화 노력 없이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를 내린다면,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로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들의 고통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남지역은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를 환영하고 나섰다. 30년 넘도록 건의했음에도 언급조차 되지 않던 상황에서 총리가 직접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도민과 함께 뜨거운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간절히 원했던 의과대학 설립의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감사의 입장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안을 조속히 마련해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나가겠다”면서 “도내 의과대학이 지역 의료 완결체계의 사령탑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식당에서 ‘잔술’ 판매 가능...주류면허 취소규정 완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면허 면허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도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

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 스포츠클럽 사고 여진 등하못길 ‘조마조마’ ▶6면

오늘 북중미월드컵 축구 예선 태국과 대결 ▶18면

팔도 핫플레이스-천안 아라리오 조각광장 ▶22면



## ‘배달용’ 전기이륜차 사면 보조금 10% 더 받는다

올해부터 배달 오토바이로 전기이륜차를 사면 보조금을 10% 더 받는다. 배달플랫폼 노동자가 자신의 이륜차가 ‘배달용’임을 입증하는 데 용이해졌다.

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20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을 목표로 총 320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목표가 같았던 지난해 목표치 5분의 1 수준인 8183대가 증가했다.

전기이륜차 누적 보급 대수는 2018년까지는 5142대에 그쳤으나 작년 말 7만1164대까지 늘었다. 2018년 이후 연도별 보급 대수를 보면 2021년 1만6858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1만4892대)과 2023년(8183대) 연속 감소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경형은 140만원, 가장 수요가 많은 소형은 230만원, 중형과 기타형은 270만원, 대형은 3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 상한액 자체는 지난해와 같으나 기존에는 기타형 상한액이 적용된 ‘화물운반용’의 상한액이 올해부터 대형과 같은 300만원으로 올랐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GENERATION  
윤조에센스 6세대

Sulwhasoo